



[해설] 1514조 가계빚 추가이자 2.5조 411만 채무자 '시한폭탄' 03



코스피	2131.93 (+35.07)	코스닥	709.46 (+13.70)
금리 (미국 3년)	1.92 (+0.03)	환율 (원/달러)	1110.70 (-10.50)(3일)

# 삼성, 오늘 인사... 세대교체 폭 관심

JY 경영복귀 후 첫 단행 김기남 등 유임 확실시 실적부진 IM, 10% 축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성의 전통적인 인사 원칙에 따라 사업부별 공과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을 맞아 미래먹거리 발굴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조직 안정'에 초점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안정적인 인사를 통해 그룹 내실을 다져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를 맡은 뒤에는 대체로 3~4년간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대표적이다. 김 부문장은 2014년

삼성그룹 정기인사가 임박했다. 빠르면 4일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경영에 정상 복귀한 이후의 첫 인사이자, 이재용 체제 5년차에 단행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삼성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안정적으로 삼성을 진두지휘하는데 주력해 왔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과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도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삼

이후 5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DS 부문을 이끌면서 역대 최대 실적 등 성과를 쌓았다.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도 2014년 첫 취임 후 여전히 신임을 유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해왔다.

고동만 삼성전자 IM 부문장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갤럭시

시 노트7 폭발 사건을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한데다가, 후속작 흥행에도 연이어 성공하면서 능력 발휘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었던 윤부근·신종균 부회장은 등기 이사로 활약 중이다. 권오현 회장도 종합기술원을 이끌고 있다.

최근 선행된 금융계열사 인사에서도 안정 기조는 뚜렷했다. 모든 CEO가 유임됐고, 직무대행이었던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는 공식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 ◆ 세대교체 이어갈까

삼성이 이번 인사에서 세대교체를 피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이재용 체제 이후 삼성은 젊음을 추구하고 평균 나이를 꾸준히 줄여온 바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야당 불참' 본회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소비자는 봉?

보험료 오르고 카드혜택 줄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카드사의 순익 감소는 물론 소비자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카드 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 축소 등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올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았지만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100%를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5~9% 가량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래저래 서민 부담이 그 만큼 커지는 셈이다.

## '손해율 120%' 실손보험료 7%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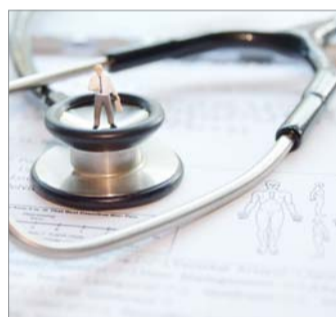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7% 오른다. 매달 약 1000원, 1년에 1만원 가량 더 내는 셈이다. 국민보험 격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0%를 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폭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보험사들은 이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종 결정한다. 보험료 인상은 통상 신상품이 출시되는 매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약 7%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변동폭은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씩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매달 1만2651원의 실손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3755원을, 손해보험은 올해 매달 1만4861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5745원을 내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보험 성격을



/유도이미지

생보 8.7%·손보 5.9% ↑ 내년 매달 평균 1000원 ↑ 중복 가입 서민 부담 가중

가진 보험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396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37만건(1.1%) 늘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 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를 돌파하면서 내년에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2016년과 2017년 실손보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으나 올해에는 동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개인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2.9%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116.6%, 손해보험사(손보사)는 124.0%였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올상이다. 이번 참조요율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사이익으로 실제 손해율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부분을 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료 조정을 검토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1일, 지난해 4월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12% 인상하고 그 이후 판매한 새로운 실손보험료는 8.6%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공개한 한국개발원(KDI)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6.15%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주 기자 hj89@

## 카드고객 혜택줄여 소상공인 달래기

소상공인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결국 소비자들의 희생이 담보가 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수수료를 낮출 때마다 비용효율화 노력을 해왔음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 절감은 '마른 수건 짜기'다. 결국 비용을 줄일 곳은 소비자 혜택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는 줄고, 연회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주중으로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당초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을 때는 현재 소비자가 받고 있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당국, 카드사 마케팅 과도 관행 개선해 수수료 인하 부가서비스 ↓, 연회비 ↑ 소비자 부담 등 논란 키워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이용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 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상당 부분은 그동안 법안위원회에 집중돼 있었다"며 "카드사는 법안위원회에 연회비도 받지 않으면서 해외 여행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담은 가맹점에 무차별적

으로 지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반회원의 카드사용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역시 "카드수수료 개편이 산정된 인하여력은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연일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카드 이용자 개개인의 수요와 관계없이 부가서비스의 효율 여부도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은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혜택으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이나 공항 VIP 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이용 등은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로 정해지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일반 소비자 빈번 혜택이 아니라 과도한 부가서비스 줄이겠다는 '합리적'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든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